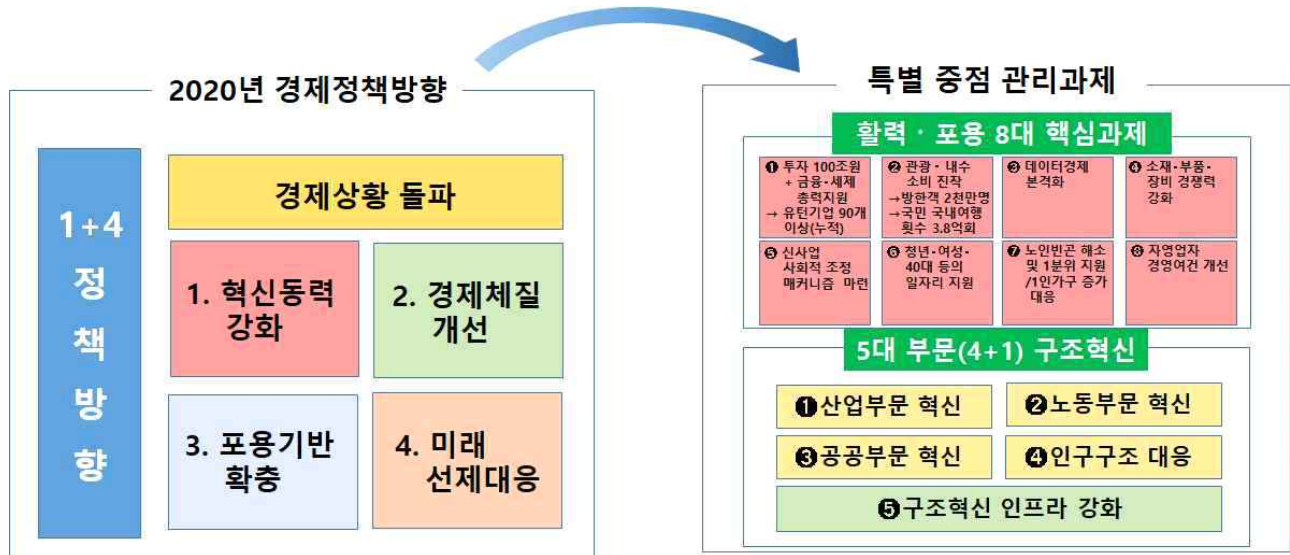


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

- '19. 12. 20(금)-



1. 경제상황 돌파

(1) 투자 활성화

- 민간·민자·공공 3대 분야 투자100조원 목표 발굴·집행 추진
 - ▶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
 - ▶ 민자사업 15조원 수준 집행·발굴 추진(집행 5.2조원, 발굴 10조원)
 - ▶ 공공주택, 철도·고속도로,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확대 추진('19년 계획 대비 +5조원)
- 금융·세제 패키지 지원
 - ▶ 중소·중견 신·증설투자 자금 지원을 위한 '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' 신설(4.5조원, 1년 한시)
 - ▶ 생산성향상시설 대상 확대(스마트공장 관련 설비) 및 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상향*
 - * (현행) 대 1%/중견 3%/중소 7% → (개선) 대 2%/중견 5%/중소 10% (대기업 '20년, 중소·중견 ~'21년)
 - ▶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('19년→'21년)
 - ▶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*('19.12월→'20.6월)
 - ▶ 산단 내 중견·중소 유턴 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('20.6월)
- 유턴 유치 강화
 - ▶ 산단 내 중소·중견기업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'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' 마련('20.6월)
 - ▶ 개정 유통지원법(대상업종 및 지원대상 확대, 국·공유재산 특례, '19.11월)을 활용한 유턴 유치 활동 강화
-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('20.上), 경자구역 혁신전략 수립('20.上) 및 규제특례 도입

(2) 국내소비·관광 중심 내수 진작

- 대규모 할인행사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소비 적극 진작
 - ▶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(일정 품목 부가세(10%) 환급 검토 '20.上)
 - ▶ 10년 이상 노후차→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% 인하(100만원 한도, ~'20.6월),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(최대 400만원, '19년→'22년)
 - ▶ 입국장 면세점 전국 주요 공항(김포 등)으로 확대
- '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'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
 - ▶ 3K(K-콘텐츠, K-뷰티, K-푸드) 등을 연계한 K-culture 페스티벌 연 2회 개최
 - ▶ 웰니스관광 클러스터·명소 확대,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 운영 및 환자·동반자 관광프로그램 등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
 - ▶ 월드 한식 페스티벌 개최('20.10월) 등 한식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

(3) 건설투자 확대

-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
 - ▶ 광역교통망 확충, 노후 SOC 개선 등 23.2조원, 생활 SOC 투자 10.5조원
-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뒷받침
 - ▶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, 주거복지로드맵 105.2만호 조기 추진
- 입지규제 특례 등을 통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
- 건설업 활성화
 - ▶ 전문-종합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유사전문업종 통합 등 업종 개편('20.6월)
 - ▶ 자본금 기준 70% 수준 완화
 - ▶ 공기산정기준 법제화 및 소규모 공사에 대한 '유지보수 공사 표준품셈' 신설('20.上)

(4) 수출회복 지원 및 대외진출

- 수출 지원체계 강화
 - ▶ 반도체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자동차, 철강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* 중심 애로 해소방안 마련
 - ▶ 3대 수출시장*에 대한 「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('19.9월)」 보완대책 마련('20.下)
 - * 주력시장(미, 중, 일, EU), 전략시장(신남방·신북방), 신흥시장(중남미·중동·아프리카)
 - ▶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(3,200개사→3,500개사) 및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('20년 200개사)
 - ▶ KOTRA '글로벌 파트너링 프로그램' 확대('19년 32회→'20년 40회 이상)
 - ▶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정보센터 설치('20.1월) 및 WTO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확대

□ 수출금융 240.5조원 공급

- ▶ 주력 및 전략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한도 일괄증액(10%p) 조치 기한 연장(~20.3월)
- ▶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 대상 '수주 지원 프로그램(0.8조원)' 및 '수입대체 특별보증(2,600억원)' 신설
- ▶ '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' 지원 확대('19년 500억원→'20년 2,000억원)

□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활성화

- ▶ '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' 마련('20.3월),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(1,000억원) 등을 통한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
- ▶ 관광·보건·콘텐츠·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금리(최대 0.5%p) 및 한도(최대 10%p) 우대
- ▶ 유망서비스 업종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험료(10%할인) 및 부보율 우대조치(중소 97.5→100%, 중견 95→97.5%) 일몰기한 연장('19.12월→'20.12월)

□ 「글로벌 코리아」를 위한 적극적 대외 진출 전략 추진

- ▶ (신남방) RCEP 및 필리핀 양자 FTA 타결 추진, 아세안 지역 진출지원 등
- ▶ (신북방) 9-브릿지 성과 가시화, 쇄빙LNG선 공동건조, 한국기업 산단개발 등
- ▶ (제3국)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위한 한·중 협력플랫폼 구축, 미국과 공동 컨소시엄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 추진

(5)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□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제도 재정비

- ▶ 「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」 제정을 통한 네거티브 방식의 일반·준공업지역 행위규제 완화
- ▶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요건 완화
- ▶ 지방 산업기반시설,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, 지방물류·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(~'22년)

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23개 사업, 25.2조원) 본격 착수

- ▶ 지역특화 산업육성+(1.3조원) 추진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 일부 지역 기업 도급 의무화

(6) 경제안정 기반 구축

□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

- ▶ 확장 재정정책(20년 512.3조원, +9.1%)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추진('20년 상반기 62% 집행)

□ 5대 리스크 요인(부동산, 가계부채, 금융·외환, 통상, 구조조정)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

- ▶ 자동차,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개선
- ▶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M&A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산·기은 정책금융기관 회생절차 협의 지원 강화

2. 혁신동력 강화

(1) DNA 확산 및 Post-반도체 육성

- 데이터 3법 개정 연계 데이터 경제 본격 추진
- '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*' 마련 및 5G 결합 신산업·서비스 창출
 - * 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,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개편, 신설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
-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('20.上) 및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 신속 정비
-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, 미래차)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
 - ▶ (시스템반도체) 정부 R&D 1조원 투자('20년~'29년),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(20%~40%)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(5~10%)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 추가
 - ▶ (바이오) '25년까지 정부 R&D 투자를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
 - ▶ (미래차)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, 전기·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(50→100%)
 - ▶ (2차전지) 차세대 2차전지 개발('20년 47억원), 전기차 산업과 협업 강화, 핵심 인력 양성 지원 등
 - ▶ (로봇) 제조·서비스 분야 협동로봇 활용 확대, 농업생산 자동화, 의료·재활 로봇 도입 등
 - ▶ (신산업 금융)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에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 공급(10조원)

(2) 주력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조기 확보

- 주력산업 스마트화·친환경화·융복합화* 가속
 - ▶ 스마트산단·공장 확대(산단 2개소, 스마트공장 5,600개 신설)
 - ▶ 친환경 차량·선박,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
 - ▶ 제조·서비스 융합 신상품 사업화 촉진(R&D, 공공실증 등)
 - ▶ 주력산업 P-CBO(채권담보부증권)로 중견·중소기업 회사채 1조원 매입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
 - ▶ 6대 분야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, 전기전자, 기계·금속, 기초화학) 100개 핵심전략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
 - *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5조원 이상 투자(~'22년), 「경쟁력강화 특별회계」 신설로 연 2조원 이상 투자
 - ▶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 발굴 목표로 R&D·자금·입지·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
 - ▶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'스타트업 100→강소기업 100→특화선도기업 100'으로 단계적 성장 지원
 - ▶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대한 세제·금융 지원
 - *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추가
-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
 - ▶ 개정 기업활력법('19.8월)에 맞춰 패키지(제도·자금·세제) 지원 확대
 - * '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 컨설팅' 확대, 산업구조고도화자금 등 정책자금 공급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,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

(3)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

- 서비스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제조업 수준의 육성 지원
 - ▶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·전략 마련('20.6월),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마련('20.3월)
-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
 - ▶ (바이오헬스) 화장품·뷰티 기술 선진화, 규제혁신, 한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화하는 'K-뷰티 혁신전략' 마련('20.下)
 - ▶ (콘텐츠) 정책금융 확대(1천억원),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, 규제개선,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집중육성

(4) 혁신금융 역할 강화

- 혁신분야 정책금융 479조원 공급 및 금융세제 개선 추진
 - ▶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전년대비 20조원 이상 확대(265조원→285조원), 혁신기술 응용 첨단 혁신성장분야(첨단제조·신소재·바이오·콘텐츠 등) 지원 6조원 이상 확대
 - ▶ 4차 산업혁명 연관사업 및 D.N.A+BIG3 분야 기업 등에 대한 보증비율, 보증료 우대지원(7,200→8,000억원 확대, 기보)
 - ▶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('20.上)

3. 경제체질 개선

(1)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

-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'한걸음 모델(가칭)' 구축으로 핵심규제 타파
 - ▶ (규제선정) 신시장 확대·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혁신에 역량 집중
 - ▶ (의견수렴) 규제 특성에 따라 해커톤·국민참여 등 맞춤형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·활용
 - ▶ (사회적타협) 사안에 따라 '상생혁신기금(가칭)', 이익공유 협약체결,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 선택적 활용
- 규제샌드박스 질적 업그레이드 추진
 - ▶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프로그램 도입
 - * (비용) 실증특례비(최대 1.2억원)와 책임 보험료(최대 1,500만원) 지원
 - (세제)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
 - (특허) 규제샌드박스 신청·승인기업 특허출원 우선심사, 특허분쟁 신속심판 처리
 - ▶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'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' 마련('20.1월)
 - ▶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규제입증책임제 확대
-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
 - ▶ 5개 영역(바이오헬스, 금융, 공유경제, 신산업, 관광 등)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

- ▶ ICT, 가상·증강현실(VR·AR)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
- ▶ 에너지·로봇, 드론 등 유망 신산업, 자동차·조선 등 주력 제조업, 소재·부품산업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산

(2) 생산성 및 잠재성장을 제고

-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
 - ▶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발표('20.上)
 - ▶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, 스마트공장 확산 기반 마련
-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를 위한 정책마련
 - ▶ (고령자) 고령층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
 - *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(분기당 27→30만원)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, 고령자 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확대(0~700만원→400~1,200만원),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
 - ▶ (여성) 맞춤형 진로 취업설계(경력이음서비스) 인력확충 및 새일센터 지원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
 - ▶ (외국인)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,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 및 숙력 외국인력 전문 인력 전환 확대

(3)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자원 확보

- 차세대·5G 기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, 고난도·도전적 R&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R&D 생태계 조성
- DNA+BIG3 등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20만명 육성('20년~'23년)
- 새로운 형태의 노동, 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
 - ▶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 강화
 - ▶ 공정계약 관행 형성을 위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·보완 및 확산

(4) 분야별 구조혁신

-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고용친화적 노동혁신
 - ▶ (고용안전성)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, 직업훈련 강화
 - ▶ (임금제도·근로시간 합리화)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, 주52시간 연차휴가 지원*
 - * 50~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 계도기간 부여,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,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·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(2년) 등

4. 포용기반 확충

(1) 수요자·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

-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 - ▶ (청년) 고교취업연계장려금 고졸 재직자 후학습장려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확대
 - ▶ (중년)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인센티브 확대(취업성공패키지II 등)
 - ▶ (신중년)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도입('20.5월) 등
 - ▶ (어르신) 노인일자리 확대(61→74만개)
-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돌봄 경제 육성
 - ▶ 돌봄·건강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.5만개 신규 확충
 - ▶ 사회서비스 산업 종합지원(사회서비스 개발 R&D 확대 등)

(2)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

-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등을 위한 공정문화 확산
 - ▶ 중소기업 기술침해, 불공정 조정·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
 - ▶ 사전사업조정협의제 도입을 통한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 구축 및 수·위탁 분쟁조정 제도개선 추진
 - ▶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
 - * 시스템 활용 항목 만점 기준 상향,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실적 평가 업종 확대 등
 - ▶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*하고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단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
 - * 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부여, 조정신청 사유 확대 등(하도급법 개정)
 - ▶ 조정협의권자 확대(중기중앙회 추가) 등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
 - ▶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 개선 추진
 - *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,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,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
 - ▶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
 - ▶ 공정위-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·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
- 상생 협력기반 강화 및 상생 협력사례 창출·확산
 - ▶ 공정거래협약·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 개정
 - ▶ 물류, SI, 광고대행,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나누기 유도
 - ▶ 동반위의 '혁신형 임금격차 해소운동'과 노사발전재단의 '일터혁신 컨설팅' 연계
 - ▶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시 '기업간 상생협력' 가점 부여
 - ▶ 상생형 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고,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
 - ▶ 기업의 지속가능경영(CSR) 지원
 - * 투·용자, 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우대

5. 미래 선제대응

□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대응

- ▶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 점검·평가 체계 구축
 - * 부처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, 실적에 대한 신속한 평가(21개월→4개월)가 가능토록 시범적으로 잠정배출량 산정·공개('20.5월)
- ▶ 배출권거래시장 기능 강화
 - * 배출기업 책임강화,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(제3차('21~'25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, '20.6월)
- ▶ 수량-수질-수생태 연계 R&D 개발 및 도시 물순환 회복 기반 구축